

# 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안전조정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0월12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4)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1)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0)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2)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 1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 1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 1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4) ..... 1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1) ..... 1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0) ..... 1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2) ..... 1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

(14시16분 개의)

○조정위원장 윤준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안전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2)
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6)
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7)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4)

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1)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30)

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2)

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정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모두 8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서는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의견과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는 이번 안전 조정의 대상이 된 대안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정부 측 의견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경우 결국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거고 이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심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실 분 또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정부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구조적 공급을 과잉시킨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더더군다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쌀이 공급 과잉일 때, 기준을 초과할 때 언제든지 정부는 시장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장관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법에 담아 놓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끝끝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도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여당이나 정부 모두가 지금 코앞에 당면한 올해 쌀 수확기 그리고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몇 차례 확인했지만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현재의 공급 과잉 구조, 그러니까 최소한 20만t이 과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구조적인 과잉에 대해서 분질미든 타작물이든 사료작물이든 다양한 형태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부는 자기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적응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질미를 가지고 20만t 이상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감이라든가 품질의 차이 때문에 아직도 시장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생산 재배 단계에서의 품종의 재배 방식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어떤 품질 내지는 품종의 특성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분질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질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되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 그런 타작물 재배 정책도 여전히 우리 법안에 담겨 있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쌀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조적인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오늘 이 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의 반대에 의해서 미루어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개정안이 안전조정위를 통과하고 또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또요?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예,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저는 우선 오늘 이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촉되시고 나서, 선임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위원회를 하는데 안전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아무도 오시지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조정위원회 속에서 각자의 다른 의견들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특히 오늘 우리의 농업이 직면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안을 토론을 통해서 채택하는,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회의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있어서 쌀값 정상화 의무화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을 계속 농민들을 돕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이걸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강하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다. 원상회복 조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의무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는 조치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변동성이 아니라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사를 지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 또 식량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 나가고 있는 주역들이 바로 우리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농사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게 하고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리고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이것은 어쩌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 방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짧지만 저도 그 책임의 하나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적인 측면에서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또 쌀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요.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랜 숙원과제였던 쌀값 폭락 문제를 법으로 보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 속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이 아니라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대응을 하고 또 구조적 과잉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대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충분히 더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좁혀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차관님, 저는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림부의 농업정책 수립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쌀 과잉생산에 대한 사전 시장격리로 쌀값은 정상화하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재도입을 통해서 구조적 과잉 현상은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밀·콩 등 재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그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으로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후에 농사를 설계할 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책 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수확기에 초과생산 예상량을 일시에 매입하여서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재정부담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매년 계속 반복되는 위기는 위기 대응이 아닌 일상 대응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량은 사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반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이 지금 남아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쌀 수입이 중단되면 지금 생산되는 쌀로 자급자족이 되는가? 그 문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겪게 되는 세계의 가스라든가 또 식량이라든가 이런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따라서 식량주권, 식량안보는 슬로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정책으로 담아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앞으로는 정말로 100년에 한번 이상 있을 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위기관리 정책이고 또 그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의 해법은 역시 법제도상 분명한 의무로 못 박는 것 또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식량·양곡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필연적으로 평시에 공급과잉될 식량의 적정 처분에 대한 방법론이나 루트가 법 체계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 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일단은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 안은 동의하시는 거고, 그러나 의무화시키는 것, 자동 시장격리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를 든다면 3%나 마이너스 5% 기준이 낮은 기준이어서 이것을 상향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장에서 탄력성을 갖게 하자는 취지가 정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의 수정안은 검토한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특별히 정부 내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삼는 부분

은,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사업 내지는 지금 공급과잉의 상황에서 쌀 대신에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자동 시장격리화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원칙적으로 그 조건이 어찌 됐든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쌀 시장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건 자체를 완화한다든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좀 더 진중하게 수정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법안은 농해수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사위라든가 전체위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수정안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근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쌀값이 올라가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거다, 농민들이 쌀을 재배할 거고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또 과잉될 거고 또 쌀값이 떨어질 거고 격리할 거다 이런 순환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굳이 표현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거다라기보다는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덜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72만ha 정도…… 현재가 72만ha 정도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72만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 정도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건데 그런 문제라면 아까 논 타작물 재배를 벼농사보다 조금 더 이익되게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벼농사보다도 좀 더 이익되게 설계를 하면,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전략작물 이것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더 벼농사보다 이익되게 설계를 하면—저는 30만t 주장하는데—6만ha 정도 재배면적을, 생산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잖아요, 차관님. 조금만 더 설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뽑아 본 바에 의하면 2000억 이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에 공급과잉 돼서 1조 4000억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벼농사보다는 조금 이익이 되게 설계를 인센티브를 주면 6만ha, 30만t 정도는 얼마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다. 과거에 논 타작 3차례의 시행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논 타작은 타작대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또 이건 이것대로 끌고 가면 충분히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에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렇다면 더 잡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 해방 이후 77년간 사실 이 쌀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자동시장격리제보다 더 강력한 제도하에 있었습니다. 추곡수매제였지요.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쌀값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77년 가까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곡수매제가 아주 강력한 거였지요. 강력한 제도였습니다. 시장격리제에 비하면 정말 더 강력한 제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국가 주도, 정부 주도로 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했고 쌀 생산량의 한 30%를 수매했기 때문에 엄청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변동직불제에 기반한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변동직불제라는 것은 쌀값이 떨어졌을 때 85%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강력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쌀 가격이 떨어지는 차액분의 85%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엄청난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쌀 정책의 역사 속에서 있는 제도였습니다. 바로 직전의 제도였어요. 2019년까지 운영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국가 주도, 정부 주도로 가격과 그다음에 생산량, 수매량 또 가격을 지원하는 제도를 불과 3년 전까지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격리는 사실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시장격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농민들이 받고 변동직불제를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동이 안 된 거지요.

저희가 볼 때 과거의 추곡수매제라든가 변동직불제 기반 공공비축제는 아주 강력한 국가 주도의 정책이었고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과 농업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정책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파동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과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전판인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으로 가면서 시장격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부의 장관의 개인 의지, 절대적 선의에 의해서 유지되고 좌지우지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을 5년, 10년, 20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쌀 시장격리를 17년 중에, 총 10년간 17차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열한 차례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5년부터 계산하면 17차입니다. 2005년부터 계산하면 17차고 올해까지 하면 18년이지요. 18년 중에 10년입니다. 10년이고, 그 중에 한 해에 차수가 많은 차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두세 번 한……

○이원택 위원 이번에 3차까지 가고 그러고 있는데, 총 17차를 했습니다.

쌀 시장격리의 역사를 보면 제가 볼 때 해마다 한 것도 아닙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장격리를 해마다 해 온 것도 아닙니다. 18년 중에 10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것이 뭐냐 하면 물량이 초과물량 대비 적은 양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후행적으로 했고요.

수확기에 한 건 딱 여덟 번입니다. 18년 중에 딱 여덟 번만 수확기에 했거든요. 이것 다 정부가 한 겁니다. 정부가 정확한 초과물량을 격리 조치한 것도 아니고 또 17차 중에 8회만 수확기에 했고요 나머지 9회는 수확기 지나서 했고요. 또 초과물량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초과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했습니다. 딱 17년 한 사례가

추가물량 플러스알파를 격리했고 그게 수확기에 해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22년 현재 시점까지 역대 정부가 몇 대를 거쳤습니까, 그렇지요? 농민의 소득 보장 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의를 갖고 역대 정부가, 이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만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역대 정부가 민주당 정부 또 국민의힘 정부도 같이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의지로 또는 정부의 의지로 과연 농민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어서, 이 부분은 원래 최소한의 장치다. 과거 추곡수매제나 변동직불제 기반 공공비축제에 비하면 시장격리제는 아주 약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19년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직불제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이전과 이후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19년 이전에는 쌀값이 떨어지고 격리가 미흡하더라도 변동직불제가 있어서 안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안전판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차관님도 잘 아실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도 쌀 정책의 역사, 시장격리의 역사를 잘 보시면서 정부가 수정안을 앞으로,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 내려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신정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조정위원장 윤준병**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진짜 농림부장관님이나 차관님이 모르실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격리 의무화가 농민들에게 기대심리를 키워 주고 쌀 생산 과잉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농민들의 기대심리라는 게 어떤 기대심리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정확하게는 기본적으로 쌀을 재배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농민들의 품목 선택이 정해지는 상황인데 변동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

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사실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라 해도 작목 선택을 한다면 보다 안전장치가 있는 작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또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보다도 공급 과잉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신정훈 위원**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장관님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농민들의 기대심리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작목 선택의 판단 기준은 이 작목보다 이 작목이 더 나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쌀의 가격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작목 선택을 쌀로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쌀 가격이 12만 원대하고 16만 원대, 17만 원대 그리고 21만 원대 이럴 때에 매년 그 해, 다음 해의 쌀 생산면적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단 한 번도 가격이 높다고 더 많은 쌀 생산면적을, 재배하는 재배면적이 더 늘어나는 사례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나 하면 감소 폭이 둔화된다는 이런 아주 희한한 논리를 또 펴고 있어요. 감소 폭이 둔화된다는.

가격하고 생산면적하고 서로 연동성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 왜? 쌀농사는 잘 아시다시피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논농사가 쌀농사에만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논에다 옥수수 심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콩을 심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반시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장비 이런 작부 체계라든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차관께서 그런 자료를 한번 제공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쌀 가격이 전년도보다 더 올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났든가 실제로 통계상에서 그런 게 있다든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채소 농사짓는 하우스가 논 가운데 몇 개가 있고요 또 축사가 있습니다. 이런 논 농업지역이 작목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농업진흥구역 등

이 논농사 지역은 법제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쌀 농사가 반 강제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이 논농사를 왜 강제합니까?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 윤미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량자급이랄까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쌀 생산수단, 우리 농민들의 엄격한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김인중 차관께서 가격이 올라가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 탄핵을 하니까 이제는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될 거다, 이런 건 대단히 궁색한 답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무화 이 법안은 이미 사실은 양곡관리법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제도화되어 있지요. 제도화되어 있는데, 사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격리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 이전의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이를테면 37만t이나 45만t을 시장격리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인 방침은 농식품부가 정합니다.

○**신정훈 위원** 농식품부 누가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관계 부처 협의도 하고요.

○**신정훈 위원**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37만t이나 45만t을 시장격리하게 되면 장관 말씀에 따르면 약 2년 내지 3년 이상 시장격리곡으로 보관하다가 처분하거든요. 사료나 아니면 기타 가공용 등등으로 처분하는데, 장관 말씀에 따르면 1만t당 소위 말해서 25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조치에 따르면 37만t 격리곡에 따르는 재정적인 손실은 사실은 8500억 정도로 이렇게 농림부가 추산을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재정 소요가 추산되는 이 결정을 국회라든가 아무런 동의 없이 시행하고 나중에 그 이후의 재정은 누가 감당합니까? 농정예산이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에요?

소위 말해서 국가나 입법기관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농림부의 실무자라든가 장관이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8000억의 소위 말

해서 재정 투입 요건을 국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입법 정신에 따라서, 또 재정이라든가 재정원칙에 따라서 8000억에 이르는 농정 관련 예산을 국회의 아무 동의 없이 소위 말해서 그때그때 인위적으로 지출 결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제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양곡관리법이 허술하게 결정된 것을 이번에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소위 말해서 과잉을 초래하고 만성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거다 그러는데 누차 이야기했지만 생산조정과 더불어서 조건이 형성됐을 때 시장격리를 하라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조치, 제도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하는 8000억씩을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들을 한번 봐 보세요. 2017년도에 37만t 시장격리했을 때 사실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함으로써 12만 원까지 떨어져 있던 쌀값이 15만 원, 16만 원대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농림부장관이 인위적으로 결정했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수확기를 피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해서 세 번에 나눠서 격리를 하다 보니까 돈은 8000억씩 낭비되고 실제로는 농민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시장가격에 전혀 영향도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누구 돈이나, 정부의 일반재정이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쓸 돈이에요. 농업인들에게 사용되어야 될 농정예산 8000억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장관이 인위적으로 쓰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입법 내용은 근거에 있어서도 정부의 반대 논리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면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평균 벼 재배면적은 1년에 1만 2200ha 정도가 줄었습니다. 1만 2200ha 정도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쌀값이 17만 원이 넘었던 해의 다음 해에는 그러면 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줄었냐? 8500ha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벼 재배면적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 정도가 조금은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평균으로 한 1만 2200ha, 그다음에 쌀값이 17만 원 이상이었던, 수확기에 17만 원 이상이었던 해의 다음 해의 재배면적은 8500ha 정도 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신정훈 위원** 그러면 3000ha가 둔화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한 4000ha 정도 되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 4000ha에 의해서 증감되는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4000ha면 한 2만t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 2만t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런데 그게 누적이 되는 거니까 어찌 됐든 첫 번째……

○**신정훈 위원** 참 차관 너무하세요. 참 너무해서. 2만t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곡물 시장에서 흡수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 한번 해 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근데 이것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로 끝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정훈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누적이 되냐고요. 그 17만 원이라도 유지된 해가 몇 해나 됐냐고요,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 거짓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신정훈 위원** 17만 원 이상으로 유지되는 해가 몇 해나 됐냐고요. 2만ha가 10년 누적이 돼도 20만ha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작년도에 38만t 과잉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그것이 뭐 때문에 과잉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작황도 기본적으로는 좋았고요……

○**신정훈 위원** 생산면적은 0.9% 늘어났어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한 6000ha 정도 늘었습니다.

○**신정훈 위원** 작황은 얼마 늘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작황은 지난해가 530이었으니까요. 평년이 한 521 정도인데 530이

었으니까 평년 대비하면 한 2% 정도는 거지요.

○**신정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작황이 9% 늘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거는 그 전 해에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전 해 말이에요,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 전 해는 또 예외적으로 작황이 안 좋았던 해니까요.

○**신정훈 위원**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신정훈 위원** 어쨌든 간에 38만t이 늘어난 그 요인 중에 생산 면적에 의해서 늘어난 것은 0.9% 늘어났어요. 소위 말해서 작황에 의해서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다고요.

이것을…… 좋아요. 차관 말씀대로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둔화될 수 있는 게 다행이네요. 겨우 3000ha에서 4000ha 둔화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요. 그 정도는 정책에서 얼마든지 우리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또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건 가격이……

○**신정훈 위원** 3만ha도 아니고 5만ha도 아닌데 3000ha에서 4000ha 늘어나는 것을 정책으로 커버 못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매년 누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를 세세연년한다고 해도……

○**신정훈 위원** 제가 통계학자나 수학자가 아니어서 그 숫자까지를 탄핵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차관님께 다시 한 번 더 신중하니 정말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마치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쌀값만 가지고 작목을 선택한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라든가 우리 농민들의 작목 선택이라는 것이요, 자기 작목을 타 작목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민과 어마어마한 조건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가격 조금 좋다고 해 가지고 참외농사 짓는 사람이 수박농사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져도 배 농사 짓는 사람이 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지 사과 농사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농지법이라는 것은요, 참 그 이야기 하면 제가 분노가 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농민들한테 너무한 거예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묶어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의 등락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쌀 농사 더 지을 거다 이런 발상, 제발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가격 보고 농사를 좀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지법이라고 하는 이 멍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논의가 자꾸 퍼지는데 두 가지 마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농식품부장관이 결정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격리라는 의사결정을 농식품부장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신정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가 그다음 해에 농협의 손실이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전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뭐 장관님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아니면 농민단체들의 얘기나 아니면 정부 내의 관계 부처들이나 모두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만t을 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20년을 놓고 봐도 조금 예외적으로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정부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같이 조금 예외적으로 시장이 변동이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가 그래도 37만t을 격리를 했고 그 격리를 한 목적은 그래도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것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컸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 쌀값을 떨어뜨렸다는 건 아니

면 정부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신정훈 위원** 저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한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정훈 위원** 그러겠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컸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농림부나 기재부답지 않습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반대로 정부는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실제로 최저가 입찰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남아도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양들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매했던 것은 정부가 이 가격을 전혀, 소위 말해서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이원택 위원님.

간단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원택 위원** 차관님 고충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문제인 정부에서 지적받던 것 중의 하나가 31만t 정도를 공매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공매는 기재부 요청이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 정확한 상황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원택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왜 공매가 이루어지는지를 관련 국과 과에 확인했는데 기재부가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공문으로 왔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때 당시에 쌀값이 되게 높았고 사실은 그래서 공매량이 급격하게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의 주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의 범주를 벗어난 결정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시장격리의 역사를 제가 즉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협의, 말은 협의지만 기재부 결정과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재부를 얼마큼 이해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결정되는 거고 기재부가 이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이해를 해서 좀 해 주면 여기 와서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형국

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관리라는 기재부의 그 범주를 우리 농산물이 사실 벗어나기 쉽지 않아 왔고 특히 쌀은 마이너스 24%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가관리 차원에서 역행,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물가 6% 잡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쌀 검토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구곡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농식품부가 쌀값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적은 물량 또 후행적으로, 선제적 시기를 결정하는데 후행적으로 후행적 시기를 통해서 격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걸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식품부도 기재부도 다 작당하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장격리 의무화가 필요한 요건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들께 조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시장격리 내지는 시장에 개입을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쌀값은 수급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원인 내지는 이유는 뭐냐, 수급에 맞는 가격에 결정이 되더라도 그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문제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쌀값이 오른다 그러면 쌀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정부는 수급 상황에 맞게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이 어느 수준을 넘어 버리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쌀값이 떨어진다,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쌀값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수급 상황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쌀값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농가의 소득이나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개입을 하는 거지요, 시장격리라는 형태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내지는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매를 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논리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변동직불제가 뭐니까, 도대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이원택 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 그거 불과 1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곡수매제, 해방 이후 77년간 추곡수매하고 그다음에 변동직불제 기반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거 다 정부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정부는 지금 탄 세상에 와 가지고…… 여기 웅덩이에 물이 넘치면 좀 빼 주고 부족하면 물 넣어 주겠다, 탄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추곡수매제하고 공공비축미, 변동직불제 기반 공공비축미, 제대로 해 온 역사가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탄 세상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조정위원장 윤준병**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돼서 재정 부담을 더 고착화시킨다는 우려, 알겠고요. 대신에 또 위원님들 말씀 내용은 쌀값 안정은 5% 이상 떨어지면 개입하라고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5%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 또 시장격리 의무화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생산 조정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시장격리가 된다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매년 시장격리 의무화가 작동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 그래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화 또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같이 안고 가든지 협의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요. 그냥 딱 도그마에 깔려 가지고 ‘정부는 안이 없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우리 못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에 대안 제시해라 그랬는데 여태 대안 제시할 의사가 없어요. 오히려 시장격리 의무화는 무조건 반대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일보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쳇바퀴 도는 논의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서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이걸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 하는 취지에서 안전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는데 지금 2차에 걸쳐서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안전조정위 자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발목 잡기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이런 상태로 안전조정위를 계속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 보자 하는 취지가 살아나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정부 입장도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 시장격리 의무화와 관련돼서 담고 있는 취지 또 이게 앞으로 운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말씀드렸으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가 있고 또 이후 절차가 있어서 충분히 여당이나 정부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오늘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신정훈 윤미향 윤준병 이원택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전문위원 박병섭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